

오피니언

월/요/광/장

조기인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시장방임주의를 신앙처럼 신봉하던 시절인 20세기 초에 유효수요이론(Theory of Effective Demand)을 들고 나와, 시장은 불안전하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총수요가 균형을 이룰하여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반복된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는 자신의 학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저축의 역설(Paradox of Savings)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 : 1929년 10월24일) 하루 동안에만 미국 주가가 20% 넘게 폭락하고 세계 대공황이 진행되면서 실업률이 치솟자 미국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었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린 것이다. 그런데 케인즈는 단언해 보 이는 이 행태가 불황을 심화시켜 결국에는 저축 여력을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일견 꺾번처럼 들리는 이 주장에 대해 케인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절약하고 저축을 늘린다는 것은 경제 전체로 보았을 때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상

무조건 절약보다 합리적 소비를

황이 정상적이려면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 늘어난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면서 경제내의 총수요는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대공황과 같이 기업들의 투자가 얼어붙어 있을 때에는 저축이 아무리 늘어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저축된 돈 만큼 소비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의 매출이 더욱 감소하여 휴·폐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은 더욱 높아져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한층 저하됨에 따라 저축할 여력이 갈수록 소진된다는 논리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빠른 속도로 경

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국민의 저축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데에는 국민의 교육열과 더불어 높은 저축성향이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앞으로 도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저축을 통해 우리 스스로 성장 자본을 형성해 나가야 함에는 이튼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저축의 역할에서 보여지듯,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통해 저축이 형성되는

인들이 최근 수개월 사이에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3% 수준으로 급등한 저축성향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반기기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합리적인 소비가 이끌어 내는 투자 활성화는 작금의 불황 타개에도 도움이 되지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긴요하다. 정부가 각종 투자 유인정책과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등을 통해 내수확대를 촉진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기업들의 금융 관련 예외사항을 현장 점검하고 지원하는 이유도 투자의 활성화야말로 경제회복의 접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세 포인 소비자들이 모두 움츠러들는데 투자가 어찌 활성화되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말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함으로써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저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작금의 경제난국이 조속히 타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저축에 앞서 빚을 내어 집과 자동차를 마련하고 평생 채무를 갚아 나가면 미국

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장애물이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불편한 것은 사람들의 거부감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으로 첫 국회의원을 지냈던 장항숙 전 의원은 공중목욕탕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그들은 내 몸에서 뿜겨진 물에 달가랴도 하면 무슨 전염병이나 옮은 것처럼 슬금슬금 피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자신의 지부를 드러내기가 싫다는 것이다. 아는 여성장애인도 재활스포츠로 역도를 선택해 유망주로 올라갔지만, 타이즈 형태의 경기복이 자신의 소아마비 걸린 다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장애물이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불편한 것은 사람들의 거부감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으로 첫 국회의원을 지냈던 장항숙 전 의원은 공중목욕탕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그들은 내 몸에서 뿜겨진 물에 달가랴도 하면 무슨 전염병이나 옮은 것처럼 슬금슬금 피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자신의 지부를 드러내기가 싫다는 것이다. 아는 여성장애인도 재활스포츠로 역도를 선택해 유망주로 올라갔지만, 타이즈 형태의 경기복이 자신의 소아마비 걸린 다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외환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지방경제

지방경제가 10년 전 외환위기때보다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회복불능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형국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지방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생산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무려 12.2%가 줄었다. 이는 1985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지방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수도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97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지방경제의 추락을 이루고 있는 건설업·부동산도 병과 직진이다.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5.1% 줄었고, 건축허가 면적은 40.3%가 급감했다. 지방의 신규 취업자도 12만5천 명에 그쳐 전년 동기(24만6천 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올해 1월 들어서

는 신규 취업자수가 3만1천 명이나 줄어들며 2003년 10월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지방경제는 거의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지방경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재정은 중부세 무력화로 거덜날 형편이고, 여기에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밀어붙이면서 지방제조업은 공동화될 처지다. 특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란 것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지방건설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지방경제 활성화'란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

지방경제는 국가경제의 뿌리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는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불황에 급식비조차 못내는 학생 는다는데...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월 3만~4만 원의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어려워진 생활형편 때문에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해 고개 숙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학생들에게는 오늘부터 시작한 새 학기가 설레기 보다는 두려움 뿐이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담임교사 추천 급식비'를 납부한 학생들의 수

는 885명에 이른다. 지난해 2007년 751명과 비교하면 17.8%(134명)나 늘었다. 지난해 담임교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급식비 지원 요청한 '담임교사 추천 급식비'도 6천714명이 나왔다. 급식비를 장기체납한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신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무료 급식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일반 학생은 급식비가 아니라 이유로 그나마 이런 혜택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결식지원 학생 수에서도 잘

나타난다. 가장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2008년 2만8천912명으로 2007년에 비해 5천여 명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급식비 체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신 빈곤층이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선 데다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조출입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특히 실업과 폐업 등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생활고에 빠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급부타라고 급식비를 체납한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급식비 지원 확대 등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급식비 때문에 시커멓게 멎은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려면 말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이희찬



토너먼트, 스포츠가 대중화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만, 사실 토너먼트는 경기 '방식'에 관한 용어는 아니었다. 이는 원래 갑으로 중무장한 채 말에 올라 긴 창으로 상대방을 찔러 쓰러뜨리는 중세 기사들의 마상(馬上)시합을 일컫는 말이었다. 하지만 토너먼트는 영주의 결혼식 같은 때에만 드물게 열렸고, 시합이 열리더라도 한 번 패배한 자는 바로 탈락되는 경기방식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제한된 형태로 시합이 이뤄진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너무도 위험했기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재정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법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통계를 보면, 불기소 처분된 과반수 이상의 피의자와 그 중 다시 재정신청에 회복된 99%의 피의자는 결국 덧없는 송사에 휘말린 셈이 아닌가. 이 같은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다른 법률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고소사건 비율, 단순한 보복감정에 치우친 악의

토너먼트의 종말을 바라며

때문이다. 시합자체가 실전이나 다름이 없어 기사들이 심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한 것이다. 토너먼트와 유사한 면을 가진 것이 우리의 고소제도인 것 같다. 대검찰청의 연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고소사건의 73%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이뤄졌다.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이 수사기관에 불려온 사람이 전체 피의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재정신청에 관한 통계를 보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진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법원에 그 당부를 다시 한 번 물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전면 확대한 작년 한 해 동안 5천677(1만 757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94천(114명)이 재판에 회복되었다. 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6% 가량의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진 셈인데, 그 중 상당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단 한 명이라도 재정신청절차를 통해

적 고소와 맞고소,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무고성 고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서글픈 우리 법률문화의 자화상은 아닌지.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뼈아픈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분명 고소는 중세의 토너먼트와 같은 단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했다. 바로 어느 쪽이든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결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상대의 도전을 피할 방법이 없고, 창이 아닌 방패만을 들고 나와야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적인 것이 바로 고소사건의 토너먼트이다. 대의와 명분이 있다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파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토너먼트는 결코 그 해답이 아닐 것이다.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종말의 토너먼트'가 아닌, '토너먼트의 종말'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기풍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농사 도우미 '영농 지원단' 운영해 줬으면

4월 초쯤 부터는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들어 있다. 더군다나 농촌의 인력난은 큰 걱정거리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대부분 공장이나 제조업체 같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농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이 불법취업자 신분이라서 단속반이라도 들이닥치면 하던 일을 쫓겨나고 달아나기 일쑤다. 그래서 농민들은 하루빨리 정부나 전라남북도 지방 시·군청에서 운영하는 영농지원단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예를 들

어서 하루에 두 번씩은 차유를 해야해 인력난이 가장 심한 낙농업의 경우 원조차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경조사 등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한 낙농가의 인력문제를 해소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 농가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영농지원단을 만들어 농번기만이라도 노동력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영농지원단을 운영해준다면 농민들은 어떤 상황에도 노동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너무나 절실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이게 하루빨리 만들어 지기를 건의한다. ▲송희수·전남 나주시 송충동

기고

문상필



지난 2001년 광주시는 대단한 결정을 했다.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면 해결될 수 없었던 광주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이동약자들을 지하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장애인에게서 '노인도 임신부도 장애인도 탈수 있는 지하철도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민연대'를 구성하여 지하철도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하고 광주시와 협상의 과정을 걸친 결과였다.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간은 스스로의 편리함과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장애물이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불편한 것은 사람들의 거부감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으로 첫 국회의원을 지냈던 장항숙 전 의원은 공중목욕탕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그들은 내 몸에서 뿜겨진 물에 달가랴도 하면 무슨 전염병이나 옮은 것처럼 슬금슬금 피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자신의 지부를 드러내기가 싫다는 것이다. 아는 여성장애인도 재활스포츠로 역도를 선택해 유망주로 올라갔지만, 타이즈 형태의 경기복이 자신의 소아마비 걸린 다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인권 광주 상징될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장애인전용목욕탕은 장애인이 자신의 처부를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베레'다. 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장애인인 목욕탕을 이용하는 2차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그들에게 깨끗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목욕이 치료를 한번 받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형에 맞춰 목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춰 전용목욕탕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광주의 목욕탕 갯수는 270개로 나와 있다. 앞서 말한 4가지의 필요성을 본다면 270대1의 비율로 장애인전용목욕탕이 들어서는 것을 결코 지나친 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 광주시민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인권도시 광주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은 인권과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다. (시민법원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

여름철 실제 생활시간을 표준 시간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을 '서머타임(summer time)제'라고 한다. 낮이 긴 계절의 시간 활용도를 높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강 증진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일광(日光)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광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라고도 한다. 18세기 후반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양초 절약 방안으로 주장했지만 시행되지는 못했다. 처음 채택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1915년)이 한창이던 1915년 독일에서였다. 뒤이어 영국과 미국 등이 잇따라 도입해 지금은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중 시행기간은 대부분 7~8개월이다. 유럽 각국의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시작돼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끝난다. 미국은 2년 전부터 3월 둘째 주 일요일~11월 첫째 일요일 사이에 적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만 채택

화재시 독가스 내뿜는 우레탄...고층 사용 금지

단열재로 아직도 우레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단열재로서 단연 최고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레탄은 그것이 탈 때 내뿜는 유독가스의 시간 이너무나 치명적이다. 두 종류와 화학 약품을 섞을 때 진땀처럼 부푼이 나오는 것이 우레탄인데 이것이 연소할 때 생기는 시안 가스는 2차대전 당시 우레탄 확산에 사용된 독가스 중 하나이다. 얼마전 한 방송에서 실험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레탄 앞면에 석고보드를 대고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평균 온도는 600도로 가

열을 하자 8분이 지났을 때쯤 독가스인 시안 가스가 퍼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토대로 수십 층 짜리 건물에 화재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보면 10분 내에 모든 사람이 대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화재 사실을 알고, 그것을 듣고, 몸이 빠져나오기까지 10분 내에 가능한가?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1층짜리 건물에서만 이 우레탄을 단열재로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건축법을 고쳐 고층건물에는 우레탄 사용을 금지시켜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나혜성·광주시 서구 서창동

無等鼓

여름철 실제 생활시간을 표준 시간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을 '서머타임(summer time)제'라고 한다. 낮이 긴 계절의 시간 활용도를 높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강 증진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일광(日光)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광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라고도 한다. 18세기 후반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양초 절약 방안으로 주장했지만 시행되지는 못했다. 처음 채택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1915년)이 한창이던 1915년 독일에서였다. 뒤이어 영국과 미국 등이 잇따라 도입해 지금은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중 시행기간은 대부분 7~8개월이다. 유럽 각국의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시작돼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끝난다. 미국은 2년 전부터 3월 둘째 주 일요일~11월 첫째 일요일 사이에 적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만 채택

서머타임제



여름철 실제 생활시간을 표준 시간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을 '서머타임(summer time)제'라고 한다. 낮이 긴 계절의 시간 활용도를 높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강 증진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일광(日光)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광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라고도 한다. 18세기 후반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양초 절약 방안으로 주장했지만 시행되지는 못했다. 처음 채택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1915년)이 한창이던 1915년 독일에서였다. 뒤이어 영국과 미국 등이 잇따라 도입해 지금은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중 시행기간은 대부분 7~8개월이다. 유럽 각국의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시작돼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끝난다. 미국은 2년 전부터 3월 둘째 주 일요일~11월 첫째 일요일 사이에 적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만 채택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두 차례 실시된 적이 있다.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표준시를 채택했던 1954~1961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1988년이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 생활 구축 방안의 하나로 서머타임제를 20여 년 만에 다시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수 진작과 관광수요 확대, 선진국형 라이프 스타일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재계의 논리다. 반면, 이미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명됐고 수십 년간 쌓여온 생체리듬을 파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반대론의 골자다. 특히 노동계는 우리보다 직장 현실에서 서머타임제는 근무시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앞선 두 차례의 중단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거울로 삼아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려는 게 먼저일 듯싶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사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어 려부 2200-634 체 육 팀 2200-669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D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